

동흥천~양양 전기공사 국제입찰 반발

〈동서고속도로〉

5공구 260억 규모…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해야”

260억 규모의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구간 전기공사가 국제입찰로 진행, 강원도내 전기업체 참여가 배제되자 지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동흥천~양양구간 전기공사를 총 9개 공구로 나눠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2·6·7·8공구는 현재 기본설계 적격심사 중에 있고 입찰이 진행중인 1·3·4·9공구는 오는 5일, 5공구는 7일 각각 개찰된다. 특히 5공구는 인제군 상남

면 상남리~하남리 구간으로 전기공사 267억원, 소방공사 41억원 등 총 3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반면 나머지 8개 공구는 각 공구마다 예산이 90억~200억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나머지 8개 공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했지만 마지막 5공구는 국제 입찰로 진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245억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지만 245억

이상 공사는 국제 입찰 자격에 해당된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측의 설명이다.

·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은 한국도로공사측의 결정에 반발, 5공구에 대한 입찰자격과 관련된 건의안을 지난 연말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 도내 전기업체 관계자는 “도내에서 300억원 규모의 전기공사가 진행되는데 정작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며 “구간을 나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해당 구간은 전기공사와 토목공사가 연계되는 등 전

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머지 8개 공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kwwin@kado.net



◇춘천상공회의소(회장 : 김대호)가 주최한 2016 신년인사회가 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최문순 지사, 한승수 전 총리, 김진태 국회의원, 이희종 강원일보사장,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한 도내 기관·사회단체장, 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로 재도약하자”

최 지사 선진국 진입 계기 강조 화합·단결로 위기 극복도 다져

도민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를 도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화합과 단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과 약진을 다짐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일대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춘천상공회의소 주최로 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춘천시 신년인사회

에서 최문순 지사는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가 본격 시작되는 실질적인 첫해”라며 “국내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 김진태 국회의원, 최동용 춘천시장, 상공인, 각급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와 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주상공회의소(회장:이해규)가 이날 호텔인터볼고 원주 대연회장에서 마련한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새해에도 천혜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살려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좌공,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성공 조성,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원주를 인구 100만명 중부내륙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강원도 발전을 이끌자”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선 이강후 국회의원, 원장목 원주시장, 이상현 원주시의장, 박진환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씨마크호텔 대연회장에서 강릉상공회의소(회장:최백기) 주관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며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

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 강릉시장, 이용기 강릉시의장 등은 신년사와 축사를 통해 “올해는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성공 개최를 위한 기틀을 다져왔다면 이젠 성공 개최를 담보할 세부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팽동진 강릉교육장, 최돈설 강릉문화원장, 이용안 강릉경찰서장, 주항중 강릉소방서장, 홍순욱 시여협회장, 최순근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기관·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남궁현·정익기·유학렬기자

서울~원주 54분 '제2 영동고속도로' 뚫린다

강원도 지도가 바뀐다 ① 광주-원주고속도로

강원발전의 핵심은 SOC확충을 통해 물류의 동맥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종 장벽으로 인해 막힌 곳을 뚫고 좁은곳은 넓혀 경제가 숨 쉬게 하는 것, 그것이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새해 강원도의 교통지도가 새롭게 바뀐다. 강원도는 올해 고속도로 준공과 신규 철도 사업 착수 등으로 강원권 대륙화 전략을 위한 신광역교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강원도내 광역교통망 전행과정과 추진계획, 과제를 시리조로 신는다.

수도권에서 원주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공사착공 5년만인 오는 11월 개통된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상습 정체에 따른 교통난 개선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인공관항에서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원주시 가현동까지 56.95km를 연결하는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54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연간 150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대기오염 감소 등 200억원의 환

작공 5년만에 11월 개통 영동고속도로 정체 해소 기업도시 주변 활성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6381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원주고속도로는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체 구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준공을 위해 올해 국비 91



억원과 민자 1933억원 등 총 2024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장 2790m의 지정 2터널 등 12개의 터널과 남한강 횡단 및 저류지 통과를 위한 여주교 등 75개의 교량이 건설된다. 광주-원주고속도로

는 올해 개통되면 2046년까지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을 한다. 원주를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서원주나들목은 원주기업도시와 곧바로 연결된

다.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미 원주기업도시는 부동산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기업도시의 일반택지와 아파트는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 원주시는 원주

기업도시 주변에 관광형 기업도시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최원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교통망이자 중부내륙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오민 106m@kado.net



춘천시 신년인사회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호)가 주최한 2016년 신년인사회가 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최문순 지사, 한승수 전 국무총리, 김진태 국회의원, 성기문 춘천시법원장, 최종원 춘천시지검 검사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최동용 춘천시장과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동계올림픽·지역역량 강화 힘 모으자”

도내 시·군 신년인사회

새해를 맞아 강원도내 상공인을 비롯해 작계각층 인사들이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호)는 5일 오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최문순 지사, 한승수 전 국무총리, 김진태 국회의원, 성기문 춘천시법원장, 최종원 춘천시지검 검사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한 언론계 대표, 이종구 강원경찰청장, 최동용 춘천시장 등 각 기관 단체장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대호 상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강원경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강원도가 가진 장점을 통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의 당면 과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최하는 일"이라며 "올림픽을 통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일

에 강원도가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이날 원주상공인들은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해규 원주상의 회장은 "성장 조건을 갖춘 원주에 강원도의 역량을 집중하고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내 경제 활성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강릉지

역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지역역량을 키워 도시를 발전시키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최범기 강릉상의 회장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로 수도권 접근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며 "관광강릉의 명성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이날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해 8개 시군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 관련기사 9·10·11·12·13·14면

강정규 kkang@kado.net

신년특집, 빅데이터로 본 강원관광 경쟁력 ▶4면

올해 새 입찰방식 실험 잇따라... 안착여부 주목

'시공책임형 CM' 공공공사 나온다

〈직접 시공하면서 기획·설계 단계까지 관리〉

'확정가격 최상설계' 턴키 시범사업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시공 책임형 CM(CM at Risk)'을 공공공사에 본격 적용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한 실험이 잇따르고 있어 안착여부가 주목된다.

5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여러 건의 대형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세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공공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CM at Risk 방식을 올해 대형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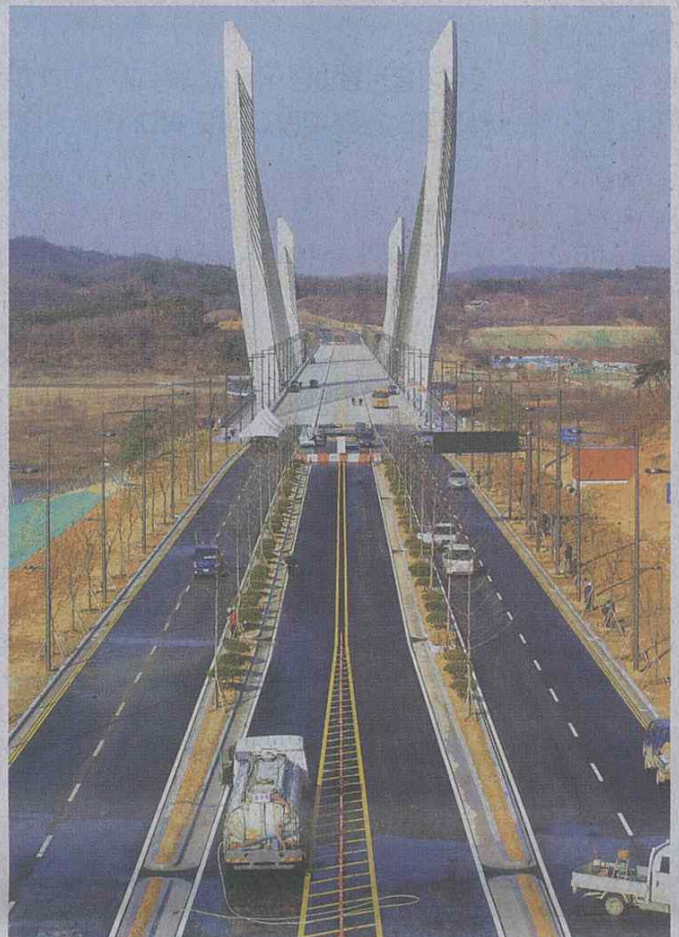
이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쇠신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관리·감리·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은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 '용역형 CM(CM for Fee)' 방식으로 발주된

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선 시공 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시공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마치는 책임형 CM 방식이 많다. 주로 시공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CM/GC(종합건설)'로 불린다.

책임형 CM은 계약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1단계로 발주자가 초기에 CM사와 설계사를 선정하고, 2단계로 공사비의 70~75% 확정 시점에 CM사와 시공사 간에 계약을 맺는다. 2단계 계약은 사실상 'CM=GC'여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GMP(총액보증한도 계약 방식·Guaranteed Maximum Price)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으로 발주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만 명시된 책임형 CM을 본격 적용하려면 국가계약법을 바꿔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적용해본 후 제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고난이도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1~2건 이내로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세종시 아람찬교 오늘 개통 5일 오후 개통을 하루 앞둔 세종시 아람찬교(금강4교)에서 관계자들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와 금남면 집현리를 연결하는 아람찬교는 2개의 주탑(고주탑 114m, 저주탑 83m)으로 돼 있으며 길이는 840m에 달한다. 아람찬교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부순환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의 전 구간 개통과 함께 개통된다. ▶▶

1면서 계속='시공 책임형 CM' 공공공사 나온다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현행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경쟁으로 귀결된다"며 "책임형 CM을 통해 시공 이외의 분야에서 건설사들이 기술력을 축적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올해 턴키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세부 가이드라인도 거의 완성 단계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 품질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형입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된다. 발주기관이 정하는 확정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성패의 열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제도들이 국내에 이식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올 재해예방사업에 1.3兆 투입

정부가 올해 1조3000억여원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한다.

홍수 시 범람이 우려되는 소하천을 정비하고, 도심지 내 빗물저류시설 등을 조성해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5일 재해예방사업에 총 1조2835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는 16개 시도와 173개 시·군·구의 총 1037곳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 2016.1.6(수) 건설경제 】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내년 300억 이상 공공공사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

건설기술진흥법령 국무회의 통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

3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된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시공평가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건설현장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19일 시행되는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한 건설안전 대책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부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이 유력하다. 다만 단계적 시행을 위해 내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우선 시범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오는 5월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지침'(고시)에 담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 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높이 31m 이상 비계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측장비와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 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업무 지침상의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해야 한다. '준공 후 다음해 2월 말'까지 실시하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는 '준공 후 60일 이내'로 조정된다. 시공평가 결과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요소에 포함되면서 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건설사고 통보 방법과 중대 건설현장사고 조사 절차도 바뀐다.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바로 보고하고, 중대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배부한다.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

한 경우, 중대 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했다.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 지수는 최대 3점까지 감점된다. 예를 들어 시공 특급기술자는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 지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건설사고로 벌점을 받으면 특급에서 고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물레이션 결과 연간 6명 내외 정도만 강등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건설신기술 개발자와 함께 신기술 관련 공중에 참여 가능하게 계약을 맺은 자도 시공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했고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 위한 교육여건 완화(1년→6개월) △시특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진입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 시 시특법 등록요건 인정 등이 담겼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김태형기자

제주2공항 갈등 조정·동서고속철 착공

〈서울~속초〉

제주·강원권

제2공항 건설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신속한 갈등조정안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활주로 조성 지역의 반대 민원이 지속되면서 향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로 관련 SOC 사업이 포화상태로 진단되면서 신항만 건설 등 제주지역 SOC 신규 창출 몰항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강원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이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범 4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강원지역에서는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가 20대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9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며, 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약 이행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면적 기준 조정(현행 661㎡에서 85㎡) △과도한 행정처분(중복처분) 조항 대폭 정리 △효율성 저하와 하자책임 불분명 등을 초래하는 동일구조물 내의 분리발주 금지 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안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은 '일자리 창출형' 산업이다. 현재 요구되는 공약 과제는 수주물량 확보도 있지만, 지역 숙원과제를 해결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 모두를 잡는 방안이다. 선심성 공약은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형용·윤석기자sys@

강원 호명~용산도로 1공구 삼양사, 적격심사대상 1순위

삼양사(대표 임민웅)가 강원도 진부역 진입도로(호명~용산) 1공구 개설공사 수주에 한 발짝 다가섰다.

조달청은 5일 강원도 수요의 이 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한 결과, 삼양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예정가격 대비 80.024%의 투찰률로 189억1768만9000원을 투찰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이날 대구시교육청 수요의 유가중학교(가칭) 신축공사 입찰을 집행하고 동서개발(대표 이승현)을 적심 1순위로 선정했다. 동서개발의 투찰률은 예가 대비 81.409%, 투찰금액은 116억719만3000원이다.

이와 함께 집행된 국가산단1초등학교(가칭) 신축공사 입찰에서는 81.408%의 투찰률로 96억355만3000원을 써낸 우남종합건설(대표 이희종)이 적심 1순위로 수주를 바라보게 됐다. 봉승권기자